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강구상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장 (gskang@kiep.go.kr, Tel: 044-414-1099)

김혁중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hjkim@kiep.go.kr, Tel: 044-414-1166)

김종혁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 (jhkim@kiep.go.kr, Tel: 044-414-1193)

박은빈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ebpark@kiep.go.kr, Tel: 044-414-1046)

민보람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연구원 (brmin@kiep.go.kr, Tel: 044-414-1086)

차 례

1. 미국 대통령 및 연방의회 선거 결과
2.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3. 정책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4년 11월 5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 ▶ 올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회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탈환을 확정했으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 트럼프 2.0 행정부는 ① 보편관세 도입, ②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③ 대중국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장벽을 높이고 대중국 견제를 심화하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보편관세를 도입하더라도 개별 국가와 협상하는 과정이 동반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은 별도의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공화당 내 당론 결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실현이 어려울 수 있음.
 - 대중국 관세 인상을 비롯한 대중국 견제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인 '투자, 연대, 경쟁'에서 '투자'와 '연대'는 사라지고 '경쟁' 측면의 일방적 제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심화될 수 있음.
- ▶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 폐기 위험을 비롯한 정책 방향 전환이 예상됨.
 - 트럼프 당선자는 친환경 관련 규제(화석연료 채굴, 내연기관차 규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
 - 「인플레이션감축법」 내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폐지는 공화당 내 반대 세력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어려울 수 있으며, 친환경차 보조금 폐지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전자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 트럼프 2.0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우려가 있음.
 - 이미 미국은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120%에 육박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 실현 시 10년에 걸쳐 7.5조 달러의 추가 재정적자가 발생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부지출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 트럼프의 재집권이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시안별 협상의 여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대미 투자를 레버리지로 삼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역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대중국 견제정책을 기회 삼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중국 견제조치로 인해 의도치 않은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 행정부를 설득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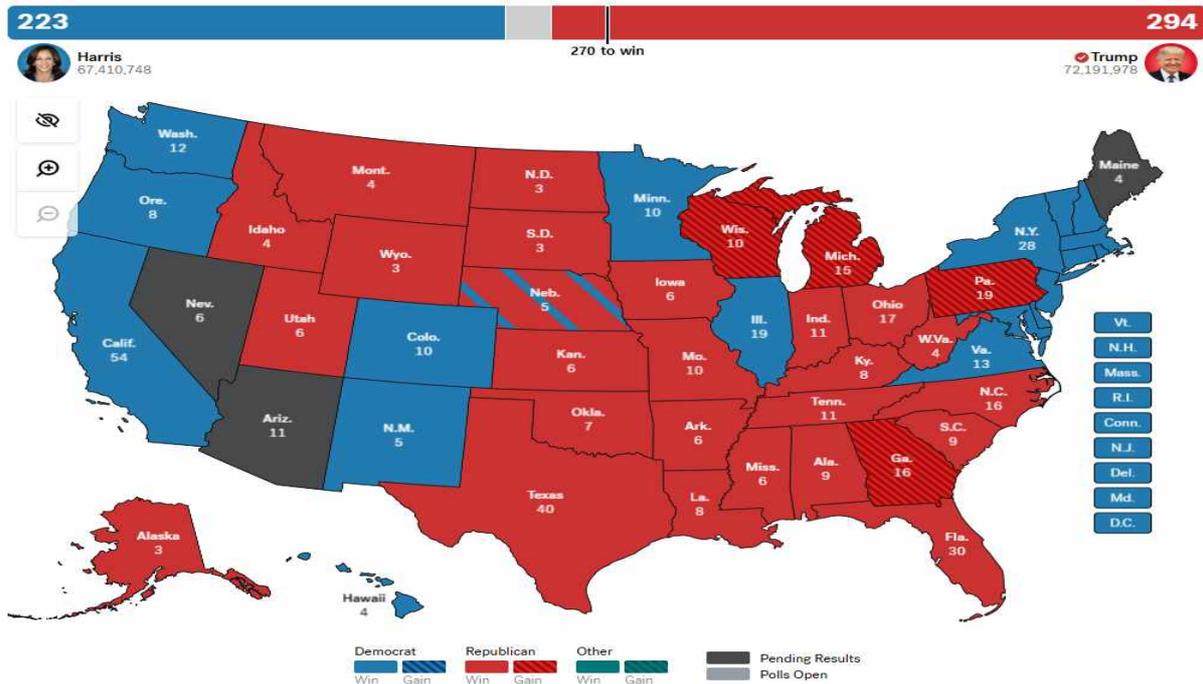
1. 미국 대통령 및 연방의회 선거 결과

가. 대통령 선거 결과

■ 2024년 11월 5일(현지시각)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 트럼프 후보는 11월 7일(한국시간 오전 9:30 기준) 현재 선거인단 매직넘버 270명을 넘는 294명을 확보(그림 1 참고)하였으며, 잔여 개표 결과에 따라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312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 준 러스트벨트 3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선거인단: 19명), 위스콘신(선거인단: 10명), 미시간(선거인단: 15명)에서의 선전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을 선택했던 조지아주(선거인단: 16명) 표심이 돌아선 것이 트럼프의 올해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트럼프 후보는 유권자 총투표수(popular votes)에서도 7,219만 1,978표를 얻으며 6,741만 748표를 얻고 있는(2024. 11. 7. 기준) 해리스 후보에 앞서면서 미국 고유의 간접선거 승자독식 시스템뿐만 아니라 직접선거 차원에서 승리를 거둬.

그림 1. 2024년 미국 양당 대선후보별 선거인단 확보 현황



자료: ABC News(2024. 11. 6.), "Election 2024 Results and Live Updates," <https://abcnews.go.com/Elections/2024-us-presidential-election-results-live-map>(검색일: 2024. 11. 7.).

나. 연방의회 선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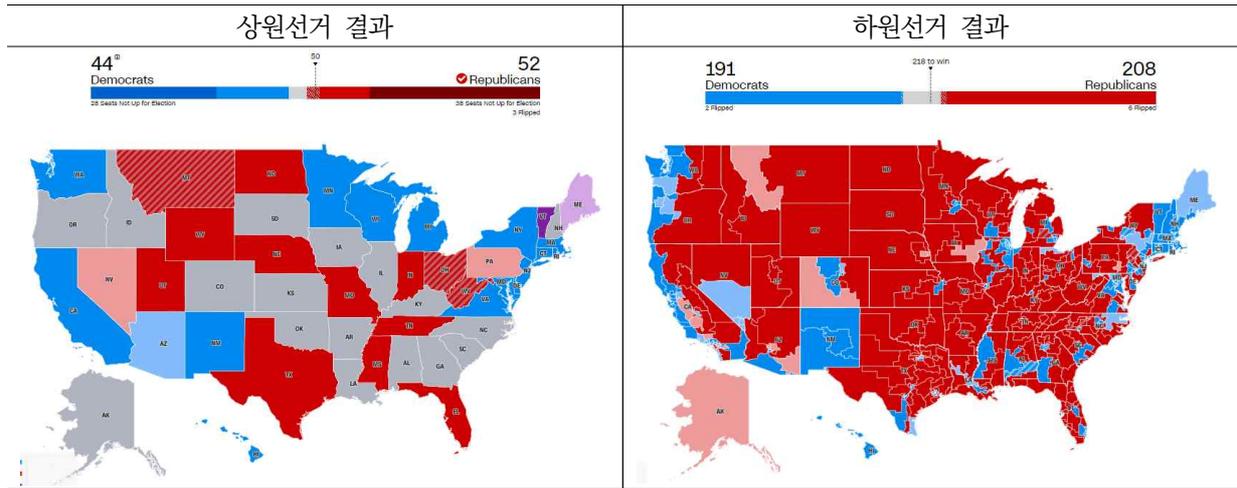
- 11월 5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119대 의회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 웨이브(red wave)’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할 경우 2025년 1월 20일 새롭게 출범하는 트럼프 2.0 행정부의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상원의원 선거] 2024년 11월 5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119대 상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함.
 - 상원의원은 주별로 2인씩 총 100인으로 구성되며, 선거를 통해 2년마다 전체의 3분의 1이 교체되는데, 이번 선거는 34석(민주당 23석, 공화당 11석)이 대상이었음.
 - 공화당은 선거 대상이었던 기존 11석을 지키고 민주당 23석 중 3석(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몬태나)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4년 만에 다수당을 탈환(2024. 11. 7. 09:00 기준)¹⁾
 - ※ 118대 상원은 민주당이 무소속 3명과 연대해 51석으로 다수당 지위를 차지
 - 웨스트버지니아주의 경우 현직 민주당 조 맨친(Joe Manchin) 의원이 불출마한 상황에서 현 주지사인 공화당 짐 저스티스(Jim Justice)가 당선
 - 이번 상원 선거의 경합주로 평가받는 몬태나[팀 쉬히(Tim Sheehy)]와 오하이오[버니 모레노(Bernie Moreno)]에서 공화당이 2석을 확보했으며, 민주당 우세일 것으로 예측된 네바다,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어 추가로 2석을 확보한다면 공화당은 총 54석을 차지하게 됨.
- [하원의원 선거] 119대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218석)을 차지하며, 2022년 이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하원의원 임기는 2년이며, 2년마다 주별로 인구수에 비례(1~52명)하여 435명 전원을 선출하고 있음.
 - 대부분의 입법 절차는 상·하원 모두에서 시작할 수 있으나, 세입(Revenue) 관련 법안 제출 권한과 연방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은 하원이 독점적으로 보유함.
 - 공화당은 2022년 11월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222석을 차지하여 213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누르고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바 있음.²⁾
 - 미국 권력승계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은 통상 다수당에서 선출되며, 실질적으로 다수당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

1) "2024 Presidential, House and Senate Election Ratings and Analysis"(2024. 11. 6.), WSJ, https://www.wsj.com/politics/elections/2024-presidential-senate-and-house-election-forecasts-5c4b54b8?st=gXmcCV&reflink=desktopwebshare_permalink.

2) Fox Business(2024. 10. 30), "What do betting markets say about control of Congress?"

그림 2. 2024년 연방 상·하원 선거 결과

(단위: 석)



주: 2024년 11월 7일(목) 09:30(한국시간) 기준임.
자료: CNN(2024. 11. 6.), "Election 2024"(검색일: 2024. 11. 7.).

2.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가. 통상정책

■ 트럼프 2.0 행정부는 ① 보편관세 도입과 ②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 트럼프는 'Agenda 47'에서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도입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으며,³⁾ 공화당 정강에도 기준관세(baseline tariff) 인상에 대한 지지가 표명됨.
 - 보편관세 논의 초기에는 미국의 관세율을 10% 상승하자는 안이 제시되었으나,⁴⁾ 이후 20% 안까지 제시됨.⁵⁾
 - 다만 대통령에게 보편관세 도입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는지 논쟁의 여지가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며, 만약 추진한다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활용하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일 것으로 보임.

3) Trump, Donald J.(2023. 6. 21.), "Agenda47: Cementing Fair and Reciprocal Trade with the Trump Reciprocal Trade Act," <https://www.donaldjtrump.com/agenda47/agenda47-cementing-fair-and-reciprocal-trade-with-the-trump-reciprocal-trade-act>(검색일: 2024. 11. 4.).

4) CBS News(2024. 6. 20.), "Trump is proposing a 10% tariff. Economists say that amounts to a \$1,700 tax on Americans," <https://www.cbsnews.com/news/trump-tariffs-proposal-10-percent-1700-cost-per-us-household/>(검색일: 2024. 11. 4.).

5) CNBC(2024. 10. 20.), "Trump doubles down on tariff plan that voters hate" <https://www.cnbc.com/2024/10/20/trump-tariffs-election.html>(검색일: 2024. 11. 4.).

표 1. 대통령 직권 관세 인상의 근거

법안	관세 인상 근거	사례	보편관세와 연계 가능성
「1962 무역확장법」 232조	· 해당 품목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발동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	· 모든 품목, 모든 국가에서의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
「1974 무역법」 301조	· 상대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치 등이 있을 때 시정 목적으로 관세 부과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중국 관세 인상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	· 모든 교역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행위를 한다는 논리 필요
IEEPA	·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폭넓게 발동 가능	· 닉슨 대통령이 지급결제 위기 시 IEEPA의 전신이었던 법을 통해 ⁶⁾ 10% 보편관세 부과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멕시코와의 '국경 위기' 사건 때 멕시코산 품목에 대한 5% 관세 인상 추진	· 국가 비상사태 선포 후 보편관세 부과 발동 가능
「1974 무역법」 122조	· 국제 지급결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수입 제한	· 거의 사용되지 않음	· 15%의 추가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으나 한시적 조치
「1930 관세법」 338조	· 미국산 상품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최대 50% 관세 부과		· 수입을 전면 차단할 수 있는 조치이지만 불공정 행위에 대한 논거 필요

자료: Maruyama, Galvin, and Reinsch(2024), "Making Tariffs Great Again: Does President Trump Have Legal Authority to Implement New Tariffs on U.S. Trading Partners and China?" CSIS Commentary, <https://www.csis.org/analysis/making-tariffs-great-again-does-president-trump-have-legal-authority-implement-new-tariffs>(검색일: 2024. 11. 4.).

- 「트럼프 상호무역법」 역시 'Agenda 47'을 통해 제시되었으며,⁷⁾ 공화당 정강을 통해서도 추진 필요성이 한 차례 더 강조됨.⁸⁾
 - 「트럼프 상호무역법」은 미국이 부과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미국에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공정한 교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와 같은 상호무역법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인 116대 의회에서 공화당 선 더피(Sean Duffy) 하원의원(27명의 공동발의자)의 주도로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⁹⁾ 있었음에도 법안 제정에는 실패함.

6) 「적성국 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ies Act)」.

7) Trump, Donald J.(2023. 6. 21.), "Agenda47: Cementing Fair and Reciprocal Trade with the Trump Reciprocal Trade Act," <https://www.donaldjtrump.com/agenda47/agenda47-cementing-fair-and-reciprocal-trade-with-the-trump-reciprocal-trade-act>(검색일: 2024. 11. 4.).

8) The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2024), "The 2024 Republican Platform: Make America Great Again."

9) "So I'm pleased to welcome Republican members of Congress to the White House. I especially want to thank Congressman Sean Duffy for sponsoring one of the top legislative priorities, to my way of thinking, that you can have. It's called "fairness," really. The United States Reciprocal Trade Act — this legislation will help finally to give our workers a fair and level playing field against other countries." The White House(2019), "Remarks by President Trump in a Meeting with Republican Members of Congress on the United States Reciprocal Trade Act."

글상자 1. 트럼프 1기 행정부, 116대 의회에 발의된 「미국 상호무역법(H.R.764)」의 주요 내용

- 「트럼프 상호무역법」이 참고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상호무역법」은 미국이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관세율이나 비관세 장벽을 미국에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무역 장벽을 상대 국가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임.
- [발동 조건] 대통령이 상대국의 특정 제품에 대해 관세율이나 비관세 장벽이 미국이 부과하는 수준보다 높다고 판단함(determine).
-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행동] 대통령은 해당 국가와 협상을 통해 관세율 인하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한 합의를 보거나, 해당 국가가 미국에 부과한 관세율, 혹은 비관세 장벽에 상응하는 관세 상당치 (effective rate of duty)를 부과할 수 있음.
-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한 행동을 취할 때 △미국과 상대국 간의 세번 체계(tariff classification), △미국과 상대국 간 관세율, △제품의 물질적 특성, △최종 용도와 해당 제품을 둘러싼 경쟁적 관계,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로의 수출 수준, △해당 국가의 교역 교란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함.
-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상대국이 더 이상 관세율이나 비관세 장벽을 미국보다 높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철회할 수 있음.

■ 의회 승인을 우회하여 추진할 수 있는 보편관세에 비해 상호관세법 제정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

- 트럼프는 의회 동의를 통해 「감세 및 일자리법(TCJA: Tax Cuts and Jobs Act)」 연장 및 확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폐기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와 공화당 내 자유무역 지지론자의 반대가 있을 경우 상호무역법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음.

표 2. 트럼프 2기 행정부 상무부 장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예상 후보자별 성향

부처	이름	경력	성향 및 특징
상무부	Robert Lighthizer*	· 前 USTR 대표	· 보호무역주의 성향
	Linda McMahon	· 前 중소기업청장 · 現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수위 공동 대표	· 미국 우선주의 ·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개혁 추구
	Bill Hagerty	· 現 테네시주 상원의원 · 前 주일미국대사	· 보호무역주의 성향
USTR	Robert Lighthizer*	· 前 USTR 대표	· 보호무역주의 성향
	Bill Hagerty	· 現 테네시주 상원의원 · 前 주일미국대사	· 보호무역주의 성향
	Jamieson Greer	· 前 USTR 대표(Lighthizer) 비서실장	· 보호무역주의 성향

주: * Robert Lighthizer는 재무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음.
자료: 언론기사 등을 종합하여 저자 정리.

나. 대중정책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국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일치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대표하는 ‘투자(Invest), 연대(Align), 경쟁(Compete)’의 대전략은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장관인 앤소니 블링컨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투자(Invest), 연대(Align), 경쟁(Compete)’으로 요약함.¹⁰⁾
 - [투자] 미국은 자국 경쟁력과 혁신의 기반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반도체와 과학법」과 같은 산업정책으로 대변할 수 있음.
 - [연대] 동류 국가와 함께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 한국·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 등 소다자 협의체 위주로 연대를 강화함.
 - [경쟁] ‘투자’와 ‘연대’를 바탕으로, 수출통제 강화, 투자규제 강화 등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함.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와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으나, 세부적인 전략(투자, 연대)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음.
 - [투자] 트럼프는 ‘관세 부과와 법인세 감축’만으로도 미국 내 제조업 투자가 충분히 유치될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¹¹⁾ 「반도체와 과학법」과 같이 개별 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IRA에 대해서도 폐기하겠다는 견해를 밝힘.
 - [연대] 트럼프 신행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소다자 협의체를 통한 가치 연대’를 추구하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일방적인 조치에 기댈 것으로 보임.
 - [경쟁]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통제나 해외투자 규제와 같은 견제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과 연장선에 있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정책도 바이든 행정부와 전체적인 방향이나 강도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발전해온 대중국 견제정책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지속 추진하면서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과정에서 동맹국의 협조를 구하는 단계가 생략될 위험이 있음.

- [반도체 수출통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수출통제를 중국 전역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확대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규제를 다자 규제로 확대하고 중국의 기술 추격을 막기 위한 세세한 조치를 동반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완수하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통제 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를 반도체 수출통제에 동참시킨 상황이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식하여 한국을 비롯한 국가가 반도체 수출통제에 동참하도록 독려한 바 있음.

10) U.S. Department of State(2022),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1) New York Times(2024. 10. 26.), “Trump Attacks Bipartisan Semiconductor Law, a Key Policy Achievement for Biden,” <https://www.nytimes.com/2024/10/26/us/politics/trump-joe-rogan-chips-science-act.html>(검색일: 2024. 11. 4.).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개별 국가와 협상 없이 FDPR이나 De Minimis 0%와 같은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음.
 - ※ FDPR(Foreign-Direct Product Rule): 미국이 만들지 않았더라도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이 포함될 때 미국의 수출허가가 필요한 이차 제재 방식
 - ※ De Minimis: 수출통제 품목의 가치 중 미국산 품목의 가치가 몇 %가 되는지에 따라 미국의 수출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
- [해외투자 규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강화한 인바운드 투자 규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로 보완된 상황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이를 이차 제재와 같은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관세]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으며, 그대로 시행되지 않더라도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 대중국 관세가 적극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표 3.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정책 방향 전망

구분	트럼프 1기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
반도체 수출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젠진화 수출통제(2018. 10.) · 화웨이 수출통제(2019. 5., 2020. 5., 2020. 8.)와 함께 FDPR 적용 · 네덜란드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EUV 공급 차단(2020. 1.) · SMIC 수출통제(202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직 16/14nm 이하, 디램 18nm 이하, 낸드 128단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 내 제조시설에 적용 [AI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모든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 금지 · 이차제재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차 제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 네덜란드와 협상하여 반도체 수출통제에 동참시켰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FDPR과 De Minimis 0% 확대 적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 [통제 대상 반도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행정부에서 규제하지 않았던 품목(예: HBM)에 대해서도 통제에 나설 가능성
해외투자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바운드 투자] FIRRMA 제정(202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웃바운드 투자] 행정명령 14105 통해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방향의 변화는 없겠지만 향후 이차 제재로 확장될 우려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차에 걸쳐 중국에 고율 관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1조 관세 한 차례 더 강화(202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국 관세 60%로 상향

자료: 저자 작성.

다. 산업정책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다양한 산업에서 정책 전환을 예고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 채굴 강화, △내연기관차 규제 폐지, △「인플레이션감축법」 폐지, △강제적인 방식을 통한 미국 약가(藥價) 인하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나 접근방식과 큰 차이를 보임.

표 4.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별 정책 비교

분야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
화석연료	· 화석연료 채굴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지속 ¹²⁾ · 러-우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전략비축유가 고갈되었다가 회복되는 추세	· 화석연료 채굴 강화 공약 · 전략비축유 재축적 공약
내연기관차	· 역대 정부 중 가장 엄격한 배출 기준 부과 ¹³⁾	·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 폐지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부여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을 통한 공공 투자 지원	· 「인플레이션감축법」 폐기를 공약했으나 전면 폐기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
바이오	· 정부 협상을 통한 약가 인하	· 다소 강제적인 방식을 통해 약가 인하 ·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 및 행정명령 13944(연방기구의 약 혹은 제약 장비 구매 시 “Buy American” 요건 강화 등) 복원

자료: 저자 작성.

■ [인플레이션감축법] 전면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공화당 내 당론을 고려해 부분적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공화당 강제 주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투자가 집중되는 만큼,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면 폐기 시 해당 주에서의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세 및 일자리법(TCJA: Tax Cuts and Jobs Act)」의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추진동력 확보 차원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 전면 폐기까지 고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상원에서 공화당이 60석 미만을 점유해 상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사용한다면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겠으나, 1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양원 공화당이 집권 1년 차에 「인플레이션감축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TCJA와 패키지로 구성한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패키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화당 내 당론 결집이 어려워진다면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TCJA 통과마저 어려워질 수 있어 수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는 비교적 쉽게 공화당 내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만, 재생에너지 보조금 부분은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친환경차 보조금] 118대 의회 하원이 「인플레이션감축법」의 FEOC(Foreign Entity of Concern) 요건을 강화한 「미국 내 중국 전기차 방지법(End Chinese Dominance of Electric Vehicles in America

12)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화석연료 생산량이 트럼프 행정부 말기인 2020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으며,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되었음. EIA(2024. 3. 11.), “United States produces more crude oil than any country, ever,”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61545>(검색일: 2024. 11. 7.).

13) EPA(2024. 3. 20.), “Biden-Harris Administration finalizes strongest-ever pollution standards for cars that position U.S. companies and workers to lead the clean vehicle future, protect public health, address the climate crisis, save drivers money,” <https://www.epa.gov/newsreleases/biden-harris-administration-finalizes-strongest-ever-pollution-standards-cars-position>(검색일: 2024. 11. 5.).

Act; H.R.7980)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공화당 내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으며, 민주당에서 오히려 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짐.

- [재생에너지] 118대 하원의장인 마이크 존슨에게 공화당 의원 18인(대표: 가바리노 의원)은 공화당이 2025년에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를 철회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음.¹⁴⁾
- ※ 원고 작성 시점(2024. 11. 7) 기준으로 해당 18인 중 10명이 재선되었으며¹⁵⁾ 나머지 의원들도 해당 지역구에서 우세를 띠고 있어 이들 모두 119대 의회에서 청정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임.
- 또한 트럼프 당선자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시행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조정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친환경차 보조금의 경우 법 개정이 없더라도 대통령이 개입해 FEOC 요건을 강화하거나 핵심광물 및 배터리 구성품 요건의 충족을 더욱 까다롭게 바꾸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와 생산세액공제(PTC: Production tax credit) 정책은 미국 국제세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입 여지가 크며, 특히 행정부 차원에서 국산품 활용 기준, 노동 조건 충족 기준, 온실가스 무배출 기술 범위 설정 등이 세제 혜택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¹⁶⁾

■ [자동차 산업 보호 및 내연기관차 규제 폐지]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펼쳤던 내연기관차에 대한 강력한 수준의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보임.

- ‘Agenda 47’에서 밝혔던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 철폐 정책은 공화당 정강에 ‘자동차산업 부활을 위한 규제 철폐’의 형태로 다시 등장함.
 - 트럼프 당선자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의 종료와 함께 모든 주에서 내연기관차의 금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¹⁷⁾ 바 있음.
 - 또한 트럼프 당선자는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를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는 입장임.
- 이 외에도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USMCA의 보호 조치(북미 부품 비율, 규정 이행 등)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당선자는 USMCA의 6주년 재협상 조항에 따라 취임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에 재협상 조항 발동 의도를 통보할 것을 밝혔으며, 미국 자동차 산업에 유리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언급¹⁸⁾

■ [바이오] 바이오산업 측면에서 트럼프 후보자는 다소 강경한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트럼프 당선자가 ‘Agenda 47’에서 제시한 정책을 살펴보면 ① 행정명령을 통해 제약 기업들이 약가를 공급국 중 최저 수준 이하를 미국에 책정하도록 조치(일종의 MFN 조치)하고, ② 제약 기업의 미국인 혹은

14) The Hill(2024. 8. 7.), “18 House Republicans ask Johnson not to target IRA clean energy tax credits”(검색일: 2024. 10. 30.).

15) 해당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 중 가바리노(뉴욕), 몰리나로(뉴욕), 후친(인디애나), 롤러(뉴욕), 라로타(뉴욕), 커티스(유타), 킨(뉴저지), 조이스(오하이오), 밀러-믹스(아이오와), 아모데이(네바다), 카터(조지아)는 승리를 확정함.

16) 김혁중(2024), 「2024 미 대선 이후 재생에너지 정책 전망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4-14를 참고함.

17) “Trump says no state would be allowed to ban gasoline-powered cars if he is elected”(2024. 10. 5.), Reuters.

18) “Trump wants to renegotiate his own trade deal with Mexico and Canada”(2024. 10. 14.), CNN.

납세자에 대한 기만이나 과도한 이윤 착취를 조사하고, ③ 행정명령 13944를 복원해 연방 기구의 약 혹은 제약 장비 구매 시 미국산 활용 극대화 등을 추구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방정부가 제약 기업과 협상해 약가 인하를 추구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트럼프 당선자는 일종의 MFN 조치를 제약 기업에 강제할 계획이며 이러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조달 과정에서 국내산 부가가치의 구성을 극대화하고 국산 품목 사용을 최대한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 다만 'Agenda 47'의 바이오산업 관련 공약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 만약 1기 행정부 때 실패했던 정책이라면 2기 행정부에서 다시 등장해도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음.

■ [재생에너지 외 자원 개발] 저렴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원자력 발전 및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와 관련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프라 확보를 도모할 것으로 보임.

-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미국 내 가정과 산업에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의 활용을 확대할 것을 공약함.
- 원전산업 확대를 표명하면서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현대화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에 대한 투자 등을 공약함.
 - 미국은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FIRST(Foundational Infrastructure for Responsible Use of SMR Technology)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음.
-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화석연료 사용 및 채굴 강화를 공언하였음.
 - 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친환경 전환 중심의 건설투자가 민간 주도의 화석연료 채굴 강화로 전환되면서, 시장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라. 재정정책

■ 트럼프 2.0 행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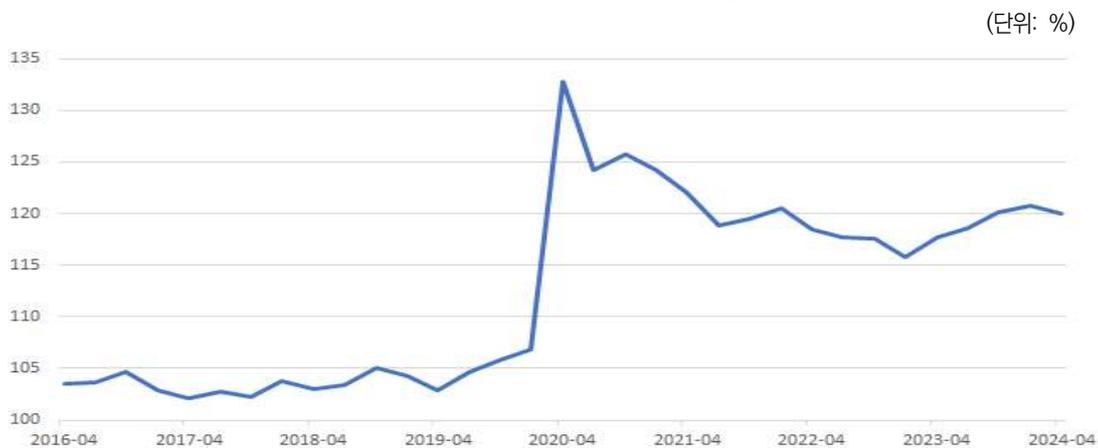
- 'Agenda 47'과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 개인 소득세 감면 및 영구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법인세]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02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최종적으로 15%까지 낮출 것을 제안
 - ※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15% 인하를 추진했으나 민주당과 합의 과정을 거쳐 21%로 결정
 - [소득세] '프로젝트 2025¹⁹⁾'에서는 소소득세율 구간 단순화(7개→2개), △대부분의 소득공제(deductions), 세액공제(tax credit), 면세(exclusions)를 없앨 것을 제안²⁰⁾

19) 보수주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이 제안한 내용으로, 프로젝트 2025가 공론화되고 이산화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프로젝트 2025가 공화당 정책 플랫폼과 관련이 없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현재 10%, 12%, 22%, 24%, 32%, 35%, 37%로 되어 있는 7개 소득세율 구간을 15%(소득 \$168,000 이하)와 30%(소득 \$168,000 이상)로 간소화

- 초과근무 및 팁에 대한 면세, 소셜시큐리티 혜택(benefits)에 대해 면세,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deduction: SALT) 상한 폐지 등 감세 정책을 추진
- 세금 감면 정책으로 세수가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공공의료, 은퇴 프로그램 등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 재정적자 규모는 1.8조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²¹⁾
 - 초당적 비영리단체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²²⁾)’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실현될 경우 2035년까지 향후 10년에 걸쳐 7.5조 달러의 추가적인 재정적자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²³⁾

그림 1. 미 연방부채의 GDP 대비 비중 추이



자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2024. 9. 26.), “Federal Debt: Total Public Debt as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검색일: 2024. 10. 24.).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개별 세금감면 조치들이 2025년 이후 종료될 예정인데, 의회에서 세금감면 연장 법적 조치를 할 경우 추가적으로 4조 달러까지 세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²⁴⁾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법인세율 인하(35%→21%),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9.6%→37%) 등 각종 세금 감면 조치들을 입법화(TCJA: Tax Cuts and Jobs Act) 시킨 바 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2025년 이후 개별 세금 감면 조치들이 종료되도록 설계하였는데, 이는 세금 감면 조치가 매우 인기가 있어 감면 연장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민주당은 세금감면 조치의 혜택이 일부 부유층에게 돌아갔다는 이유로 감면 연장에 반대하고 있어,

20) “Project 2025 would overhaul the U.S. tax system. Here’s how it could impact you”(2024. 7. 12.), CBS NEWS.

21) “US budget deficit tops \$1.8 trillion in fiscal 2024, third-largest on record”(2024. 10. 19.), Reuters.

22)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23)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2024. 10. 7.), “The Fiscal Impact of the Harris and Trump Campaign Plans.”

24) “Trump Has Tossed Out Some Unorthodox Tax Proposals—With Scant Details”(2024. 6. 14.), The Wall Street Journal.

의회에서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 경우 2026년에는 60% 이상의 가구가 세금 인상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의회에서 세금감면 연장 법적 조치를 할 경우, 정부의 세수 부담은 4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음.
 - 민주당도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감세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감세 연장 조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부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 ‘전면적인’ 감세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10년에 걸쳐 약 4조 달러 규모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대규모 감세정책과 세금 감면 연장에 따른 세수 부족을 ‘트럼프 관세²⁵⁾’ 등 다른 부분에서 충당할지, 아니면 정부지출을 줄여 해결할지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감세 연장에 동의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부분적으로는 감세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면적인’ 감세 연장으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 세수 부족을 ‘트럼프 관세’로 해결하기에는 관세 인상을 통한 세수 증가액이 세금 감면액에 비해 너무 작아 이를 대체하기에는 ‘거의 확실히 역부족(almost certainly too small)’이라고 평가됨.²⁶⁾
 - 미국은 연간 4조 달러 미만의 재화를 수입하고 있고, 개인 소득세로 2.5조 달러를 징수하고 있음.
 - 소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70% 이상의 관세율이 부과되어야 함.

마. 이민정책

■ 불법 이민 이슈는 경제와 함께 대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주목받아 왔는데, 트럼프 2.0 행정부는 2025년부터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불법 이민자를 본격적으로 추방할 것으로 예상됨.²⁷⁾

-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추방 작전(largest domestic deportation operation in American history)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음.²⁸⁾
- [남부 국경 폐쇄 및 구금시설 건설] 남부 국경을 폐쇄하고, 이곳에 이민세관단속국(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구금시설을 추가적으로 건설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 주둔 미군을 소환하여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배치하는 등 군과 주 방위군을 불법 이민자들을 검거하고 추방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²⁹⁾

25) 무역수지 적자와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

26) “Trump Has Tossed Out Some Unorthodox Tax Proposals—With Scant Details”(2024. 6. 14.), The Wall Street Journal.

27)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2024. 9. 9.), “Trump vs. Harris on immigration: Future policy proposals.”

28) “Trump says he will carry out the ‘largest domestic deportation operation in American history’ if elected”(2023. 9. 20.), Fox News.

29) “Trump tested the limits on using the military at home. If elected again, he plans to go further”(2024. 10. 14), AP.

- ['플로레스 합의' 폐지] 아동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한 '플로레스 합의(Flores Settlement Agreement, 1997년)'를 철폐하고, 불법 이민자 가족에 아동이 있더라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공화당은 '미성년자를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전체 가족을 석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밀입국에 미성년자를 무리하게 동행하거나 이를 악용한 미성년자 유괴 등의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함.
- [국경 장벽 건설 재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추가적으로 200마일의 '물리적 장벽(physical barriers),³⁰⁾ 건설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힘(2023년 3월 4일).
 -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933마일에 이르는 미국 남부 국경에 458마일의 물리적 장벽을 건설하였음.
-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 종료] 인도적인 목적으로 임시로 체류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프로그램(parole programs)의 남용을 막겠다고 밝힘(2023년 11월 1일).
 -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 '취임 첫날(Day One)' 권한 남용을 종료(shut down)시키겠다고 강조함.

■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는 2007년 기준 1,200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어,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³¹⁾

- 서류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민자 수는 1,050만 명(2021년 기준)이며, 이 가운데 2/3는 미국 내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추산됨.³²⁾
- 2022년 기준 불법 이민자 수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주(189만 명)이며, 그 다음으로 텍사스주(160만 명), 플로리다주(120만 명), 뉴욕주(65만 명), 뉴저지주(47.5만 명), 일리노이주(40만 명) 순임.
-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불법 이민자 수도 2020년 740만 명에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780만 명, 830만 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2008년과 2011년에도 830만 명을 기록한 바 있으나, 2020년(740만 명)까지는 점차 줄어들었음.
- 최근 미국 내 여론은 불법 입국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³³⁾
 - Economist/YouGov가 실시한 여론조사(10. 19.~22.)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지지(49%)한다는 응답이 해리스 부통령(36%)보다 13%p 높게 나타남.

30) 펜스, 벽, 블라드(bollards) 등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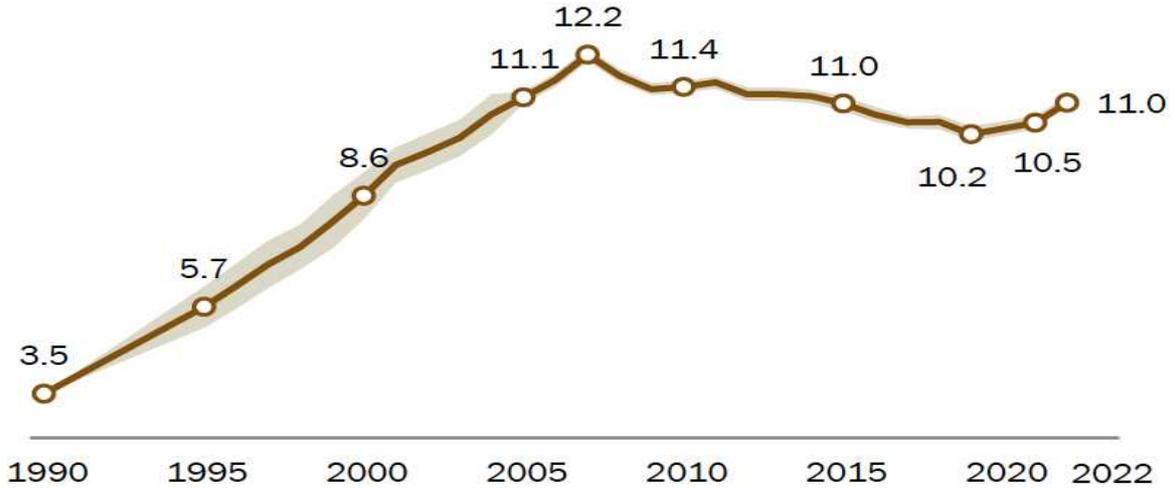
31) Pew Reserch Center(2024. 7. 22.), "What we know about unauthorized immigrants living in the U.S."(검색일: 2024. 10. 28.).

32) "Trump's deportation plan is modeled on 'inhumane' 1950s program, experts say"(2023. 9. 20.), The Washington Post.

33) Real Clear Politics(2024. 10. 23.), "Poll Shows Support for Stricter Immigration Measures."

그림 4. 미국 불법 이민자(unauthorized immigrants) 수 추이

(단위: 백만 명)



주: 음영 부분은 90% 신뢰 구간을 나타냄.

자료: Pew Reserch Center(2024. 7. 22.), "What we know about unauthorized immigrants living in the U.S."
(검색일: 2024. 10. 28.)

3. 정책 시사점

■ 트럼프 2.0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이민정책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이 소비둔화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는 소비자물가 상승과 미국 비즈니스 경쟁력에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³⁴⁾

○ TD Securities는 10%의 보편관세 부과 시 물가는 0.6~0.9%p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민정책과 결합 시 경제성장률을 1~2%p 낮출 것으로 전망함.³⁵⁾

○ 과거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다른 국가들이 사과부터 위스키까지 모든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할리데이비슨의 경우 수출 상대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면서 생산지를 태국으로 이전하였음.

-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이민자 유입 증가는 임금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빠른 노동력 증가세는 잠재 성장률 상승에도 기여하였음.³⁶⁾

■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편관세 부과 등 급진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는 남겨둘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34) "Trump's Tariffs and Economic Risk"(2024. 10. 22.), The Wall Street Journal.

35) "Specter of Trump Tariffs Hangs Over Markets"(2024. 8. 18.), The Wall Street Journal.

36) "Immigration helps explain US economic strength: Goldman"(2024. 3. 18.), The Financial Times.

- 트럼프 1기 행정부 사례를 살펴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편관세 부과 전후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조정을 가할 가능성이 있음.
 - [과거 사례: 301조 관세]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를 한 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4차에 나누어 부과해 중간 협상을 시도하고 관세율을 지속 조정했으며, 최종적으로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을 통해 4-2차 관세부과가 취소된 바 있음.
 - [과거 사례: 232조 관세] 232조 관세는 발표 당시 일률적으로 부과되기는 했으나,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는 국가안보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면제(2018. 3.)되기도 했다가, 다시 쿼터로 전환(2018. 6.)되는 등 변화를 거쳤음.
 - 보편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한정된 232조나 중국 전용 301조 관세와는 차원이 다른 전 품목·전 세계 대상 관세라는 점에서 그대로 추진하기보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둘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돋보이는 수준의 대미투자 실적을 레버리지로 삼아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함.
 - 만약 보편관세가 원안대로 도입된다면 미국 내 제조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한국기업들의 생산 단가 상승과 생산 규모 위축이 일어날 수 있음.
 - 또한 향후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로 인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수출이 현지 생산으로 전환되고 무역수지가 서서히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무역수지 적자를 감축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을 성실히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 논리로 제시할 수 있음.
 - 기업 차원에서는 개별 기업의 투자가 미국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상세하게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질 수 있는바, 향후 한국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한국의 대미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와 관련이 깊은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 트럼프 당선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사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 트럼프 당선자는 「반도체와 과학법」 내 보조금 필요성을 평가절하하면서, '관세부과와 법인세 인하가 이루어지면 기업들이 미국에 자체적으로 투자'한다는 입장이며,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훔쳤다"³⁷⁾라고 언급하는 등 상당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자는 폐기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 ※ 다만 재생에너지 투자 수혜를 받고 있는 공화당 강세 주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인플레이션감축법」 전면 폐기는 의회 논의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높음.
 - 이 외 많은 부분(관세, 세제, 규제 변화)에서 기존 바이든 행정부에서 큰 정책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37) CNN (2024. 7. 2.), "Trump says Taiwan stole America's chip industry. But that's not true," <https://edition.cnn.com/2024/07/23/tech/trump-taiwan-tsmc-chips-industry-hnk-intl/index.html>(검색일: 2024. 11. 7.).

- 이러한 정책 추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 기업은 미국 내 사업 운영 시 유연한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하이브리드차도 생산하는 계획을 세워³⁸⁾ 신축적인 운영을 예고하고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격화될 대중국 견제정책은 한국기업 입장에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보다도 더욱 강경한 대중국 견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중국의 기술 탈취, 보조금 등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에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관세 인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미국시장 내에서 최대한 중국의 재화 수입을 차단하는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중국이 압도적인 지위를 누렸던 분야에 대해 한국기업이 미국시장을 새롭게 발굴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간 목표의 충돌로 오히려 중국의 미국 내 사업 기회가 확대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보조금이라는 당근’과 ‘중국과의 협력 차단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활용해 중국산 소재·부품·배터리가 미국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는데, 만약 친환경차 보조금 자체가 사라진다면 이러한 방파제 효과도 함께 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보조금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원했던 방향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미국시장에서 핵심 재화에 대한 중국의 공급을 차단하는 대목표와 일관되게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민하도록 독려해볼 수 있음.

■ **트럼프 2.0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조치는 트럼프 1기 및 현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점점 고도화된 수단을 병행하여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대중국 통상정책 수단으로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기업을 Entity List에 등재하여 수출통제 대상을 관리함.
- 현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첨단반도체 수출통제와 함께 「반도체와 과학법」 가드레일(guardrails) 규칙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음.
 - 대중국 고성능 AI 반도체 수출통제와 함께 중국 내 특정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에 들어가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함으로써 중국의 해당 분야 굴기를 견제하고 있음.
 - 또한 「반도체와 과학법」의 가드레일 규칙을 통해 동법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의 중국 내 첨단반도체 및 구형(legacy)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을 금지함.

38) 연합뉴스(2024. 4. 25.), 「현대차 "美 전기차 전용공장서 하이브리드차도 생산...시설투자"」(검색일: 2024. 11. 7.).

- 트럼프 2.0 행정부는 상기 수출통제 수단들을 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통제 대상 품목의 범위도 확장할 수 있어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운영에 따른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양자주의적 통상정책 추진 경험에 비춰볼 때, 바이든 행정부 시기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협조했던 네덜란드와 일본에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동참을 요청할지는 미지수임.
- 따라서 수출통제는 물론 「반도체와 과학법」의 가드레일 규칙을 관장하는 상무부를 통해 정책 변화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중국 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한미 간 산업·공급망 대화 채널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 및 요구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정부 공조를 통해 이루었던 성과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일관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제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Validated End-User) 지위 부여는 한미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안으로,³⁹⁾ 이는 행정부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지위가 달라질 수 있어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도 연속성 있는 VEU 지위 인정이 필요함.
 - 미국의 중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통제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수출허가 절차를 통해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야 하지만, 현재는 VEU 지위 부여(2023. 10.)로 인해 이러한 절차에서 면제된 상황임.
- 이 외에도 미 행정부가 개입해서 한미 정부 간 협의 사항 중 민감한 사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당선자의 원자력 발전(및 SMR)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원전 시공 및 운영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SMR 수출 공동 추진 등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HILBC(한미원자력고급위원회)가 2018년 이후 개최되지 않았고, 2022년 5월과 2023년 4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모두 원자력 협력 의사를 밝혔으나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자력 협력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KIEP**

39) 조선비즈(2023. 10. 17.), 「통상본부장 “美, 삼성·SK하이닉스 VEU 승인, 굳건한 한미동맹 보여줘”」(검색일: 2024. 11. 7.).